

[사회] 2013 국가직 9급시험 총평 및 해설

담당 : 직광용 교수

총평 :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사회시험은 대체로 각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형식이며, 난이도는 중급수준이며 일반적으로 무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과목에 대한 문제분포는 법(5)과 정치(5), 경제(6), 사회문화(4)로 출제 되었으나, 다음 시험은 법과 정치에서 1~2문제 줄어들고, 사회문화에서 1~2문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시험유형은 수업시간에 몇 번씩 반복하여 강조하였던 내용이 모두 출제되었으며, 문제풀이 교재에 이번 시험의 유사문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크게 어려움이나 시간 부족없이 잘 치루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사회시험은 이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진단해 봅니다.

시험의 결과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이번 시험에 모두가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혹시 다음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의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수험생활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의 구성 (“재” 책형)

문항	과 목	출 제 내 용
1	경제	정부의 금융정책
2	법과 정치	정치, 직접 민주정치-국민투표(주민투표)
3	법과 정치	정치, 국제정치-현실주의, 이상주의
4	법과 정치	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5	법과 정치	정치, 선거제도-대표자 선출방식
6	법과 정치	정치, 근대의 정치사상-루소, 로크
7	경제	수요의 일반원칙-보완재, 대체재
8	경제	환율의 변동
9	경제	시장실패-외부경제, 외부불경제
10	경제	실질경제성장률
11	법과 정치	정치,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12	사회문화	문화변동-문화지체현상, 아노미현상
13	사회문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기능론, 갈등론
14	법과 정치	법, 가족관계-상속권
15	사회문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실험법
16	사회문화	사회보장-공공부조 정책

17	법과 정치	법,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8	법과 정치	법, 기본권의 발달과정
19	법과 정치	법,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20	경제	불평등 지수-5분위 분배율

한 국 고 시 학 원 803-6868

문항	정답	해설
1	④	④경기과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2	②	②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는 임기중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교체할 수도 있으므로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3	①	①국제정치를 보는 시각, 현실주의 ②③④는 이상주의
4	③	③‘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지 않으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5	①	(가)국가는 각 선거구 최다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므로 소선거구에 해당한다. (나)국가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차지한다. ㄷ. (나)국가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선거구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이 높다. ㄹ.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은 중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6	④	(가)는 루소, (나)는 로크 ①루소는 직접 민주정을, 로크는 간접 민주정을 주장하였다. ② 홉스에 대한 설명 ③로크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①	A재에 대하여 B재는 보완재, C재는 대체재이다. 교차탄력성은 보완재는 분모 분자가 역의 관계이므로 음(-)의 값, 대체재는 분모 분자가 정의 관계이므로 양(+)의 값을 갖는다.
8	④	그림은 환율하락에 대한 설명 ①물가상승의 요인은 환율상승일 때 작용한다. ②수출증가는 환율상승일때 유리하다. ③환율하락은 원화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진다.
9	②	(가)는 소비나 편익의 외부불경제 외부불경제는 과다생산이 문제이므로 거래량을 줄여야 하므로, 수요 감소를 해야 한다. (나)는 생산이나 비용의 외부경제 외부경제는 과소생산이 문제이므로 거래량을 늘여야 하므로, 공급 증가를 해야 한다.
10	③	①실질경제성장률의 증가폭이 감소한 것이지, 경제규모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 ②물가변동의 상승폭은 변동이 없지만, 물가 자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변동이 있다. ④물가지수(물가상승률)=명목경제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 이므로 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이 양수값이므로 명목경제성장률도 양수(+)값이다.
11	③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 가미 ㉠ 국회의원의 각료(장관) 겸임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제

		㉞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㉟ 임시국회소집요구권 ㊱ 부서제도 ㊲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12	㉑	㉑은 문화지체현상, ㉒은 아노미현상 ㉓머튼은 계급분화를 인정한다. ㉔머튼에 대한 설명이다. ㉕비물질문화보다 물질문화의 속도가 느려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지체현상에 가까운 표현이다.
13	㉓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에 대한 입장이다. ㉑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 ㉒는 갈등론에 대한 설명 ㉔기능론에 대한 설명
14	㉔	A씨의 사망으로 상속권자는 딸, 아들, 아내이다. 상속비율은 1:1:1.5이므로 2/7:2/7:3/7과 같은 비율이다. (2/7)*2.1억은 6천만원, (2/7)*2.1억은 6천만원, (3/7)*2.1억은 9천만원이다. 아들은 치료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으므로 아내가 받는 상속의 합은 1.5억이다.
15	㉔	㉑(가)는 실험집단, (나)는 통제집단이다. ㉒㉑이나 ㉒모두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전반적인 상황을 측정한다. ㉓협동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나)집단에서 사후검사점수가 더 올랐다면,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가설은 기각된다.
16	㉒	공공부조에 대한설명 ㉑사회보험은 예방적 적극적이지만, 공공부조는 사후적 소극적이다. ㉓공공부조는 보완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㉔근로연계복지, 즉 생산적복지에 대한 설명이다.
17	㉒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8	㉔	(라)는 사회권적 기본권(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사회보장권, 생존권) ㉑㉒㉓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다)에 해당한다.
19	㉑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중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한다.
20	㉓	㉑소득이 아니라, 소득비중이라고 해야 맞다. ㉒5분위 분배율은 1(평등)에서 1이상(불평등)의 값을 가지므로 1보다는 계속 커지므로 불평등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㉔개인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이라 해야 맞다. 개인평균소득은 전체개인의 평균소득이며, 중위소득은 소득순위가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이다.

♣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